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5/ 22 통권 1676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신바람 경영은 없다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사무용품 등은 소모품으로 반영후 결산시 소모품비로 대체한다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 기업 특각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채납 천대만 상, 국세청 철회
-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 탄탄한 업무협력으로 든든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증개하는 어플 서비스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요건인 창업이란 뭘까요?>

개념, 구분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방법, 요건 등(조특법 제6조)
세액감면 계산방법 (5년간 법인세, 소득세의 100% 또는 50% 감면)	① 중소기업 창업시 처음 5년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적용함(감면액 = 이익·소득×세율×(100% :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50% :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과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창업보육센터 등) ② 창업벤처중소기업 : 처음 5년간 소득의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해당업종	대부분의 제조업 등, 광업·건설업, 유통 도·소매,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 기술서비스업 등(제외 :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수의사 등)
창업	<div> <div>새사업</div> <div>최초 개시</div> <div>사업분리, 임직원 개시</div> </div> <div> <div>합병·분할 등</div> <div>개인사업 법인전환</div> <div>폐업 후 재개업</div> <div>사업확장 업종추가</div> </div>
창업의 판단 유권해석 등 (1인 복수창업감면됨)	<div> <div>기존 사업 유지하면서 다른조직, 다른 장소에 신규사업은 창업임(둘다 번성)</div> <div>기존 사업의 일부 분리 설립하면서, 해당회사 임직원이 사업분리 후 실질 대표자로 별도운영 등</div> <div>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기존 사업의 50% 이상 승계, 인수, 매입 등(50% 미만 인수는 창업임)</div> <div>기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div> <div>폐업 후 개시,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div> <div>사업 확장이나 기존사업의 추가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의 최초개시가 아닌 경우</div> </div>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 설립하여 동일업종 영위도 창업임(법인 대표자가 다른 지역에 개인사업 새로 개시해도 창업임) : 기존 사업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창업 아님. 기존사업자의 사업 일부나 전부승계 운영이나 사업창출 효과 없으면 창업 아님. 개인 폐업 후 동일업종 법인설립시 창업아님. 여러개 법인을 연접 다른장소에 설립해도 창업임. (그러나, 연접장소의 인적·물적설비 승계하면 창업 아님)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76호 / 주간 21호

2024. 5. 22.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요건인 창업이란 뭘까요?	표지
C E O 에 세 이	신바람 경영은 없다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출장여비 증빙미수취시 비용 인정 여부 문의 - 기계장치의 무상 양도 - 돌비 대납분 정산 - 퇴직정산 특례 적용 범위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사무용품 등은 소모품으로 반영후 결산시 소모품비로 대체한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 가능한 연말정산 공제누락 사례 - 주요국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현황	8 9
직장인 Survival	패배가 예상되는 경쟁은 하지 마라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서면원천-2440, 2023.04.19) -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 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 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5731, 2023.10.23)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전문강사료는 기타소득일까... 중소세 개인별 유의사항 신고검증 받는다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증개하는 어플 서비스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12
세무정보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 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 미של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채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 탄탄한 업무협력으로 든든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14 18 24 33
회계정보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신바람 경영은 없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선동경영은 있을지언정 신바람 경영은 거의 거짓이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사람들을 온갖 교활한 말로 그럴싸하게 속이는 경우가 많다.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속이는 것을 일컫는다. 세상살이가 급변하며 미래를 가늠하기 힘들 때 불안한 민심을 파고드는 무당과 잡신들의 놀음이다.

교언영색(巧言令色).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을 말한다. 본처(本妻)는 모든 구성원들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근본을 지키는 변함없는 성실을 유지한다. 그에 비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독버섯처럼 일시적으로라도 화려한 교태를 꾸며내는 첩의 생리가 교언영색이다. 기본을 어긴 편법이 끝내 보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혹세무민이나 교언영색을 세월이 흐른 후에 간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수가 재림하고 심판의 날이 닥쳐와서 세상이 들어 올려진다는 ‘휴거’를 소재로 많은 사람들을 속인 종교인.

작당을 하여 술책을 짜고 ‘믿어 주세요!’를 연발하면서 국민을 속여 결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수천억원을 삼킨 전직대통령. 세상사람들에게는 변신을 강요했지만 그 스스로는 분식회계 등으로 그대로인 재벌오너.

신바람 경영이니 하며 한때 호들갑을 떨던 해괴망측한 경영이론도 마찬가지다. 재벌 계열사의 가전제품개발을 위해 조직의 낙오자(?)들과 함께 연구 개발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는 신바람 경영. 그것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학자의 연구소 작업은 될지언정 냉철하고 지속적인 생산현장과 기업의 현실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고 또 한발 앞서는 경영이론으로까지 과대 포장되면서 그 주장을 담은 책은 장안의 종이 값을 높이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허무맹랑하다. 그런데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경영기법과 전략이나 비결이 경영 성공자의 입을 통해 또는 학자들의 포장술을 통해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 요란하게 떠들어댈수록 그 저의는 딴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한국의

경영현장에서는 거짓이나 현학적인 지식놀음으로 결판나는 게 허다하다. 비극이다. 지속적으로 진정 신바람 내려면 복잡 미묘한 비책이 따로 없다. 복잡 미묘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학자의 이론은 될지언정 기업이나 국가의 경영전략과 정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편성을 띤 상식이 중요하다. 상벌이 공정해야 하고 보상이 엄정해야 한다. 정직해서 신뢰가 축성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 개발도 어느 날 갑자기 잠꼬대처럼 나오는 게 아니다.

꾸준한 근면과 연구에서 나오는 것이다.

약200년전 전쟁에 져서 많은 국토를 빼앗기고 황무지만 남은 덴마크를 일으켜 세우는데 앞장섰던 정신적 지도자 그룬트비히. 그는 당시 덴마크 청년들에게 기발한 묘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며 흑세무민과 한탕주의를 열정적으로 경계했다.

“땀과 봉사를 요구한다. 그러면 위대한 덴마크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아는 상식 수준의 기본이다. 여론과 인기에 영합하는 표플리즘을 극복했다. 진실한 그룬트비히에게 영향을 받은 은퇴한 대령 달가스는 고통을 감내하며 황무지에 성실히 나무를 심어 나갔다.

현재 덴마크는 나무수출국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10일 (금)	5월 13일 (월)	5월 14일 (화)	5월 16일 (목)
미	달	러	(USD)	1367.90	1367.90	1370.10	1369.00
일	본	엔	(JPY)	880.53	878.01	876.95	885.37
영	국	파운	(GBP)	1713.84	1713.36	1720.50	1736.99
캐	나	다	(CAD)	1000.33	1000.22	1002.30	1006.58
홍	콩	달	(HKD)	175.05	175.04	175.37	175.32
중	국	원	(CNH)	189.20	189.27	189.21	189.08
유	로	화	(EUR)	1475.21	1473.78	1478.27	1490.70
호	주	달	(AUD)	905.82	903.50	905.50	916.75
싱	가	폴	(SGD)	1011.76	1010.04	1012.49	1018.45
말	레	이	(MYR)	288.54	288.65	289.54	290.84

출장여비 증빙미수취시 비용 인정 여부 문의

Q

출장여비 증빙미수취시 비용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여비규정이 없지만 출장명령서 상 출장여비(숙박비) 금액(10만원 초과)이 고지되어 있다면 증빙미수취해도 비용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시 인정해주는 금액 한도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A

1.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숙박비 등에 대한 정규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시에 는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증빙 미수취 한도는 3만원 이하 금액입니다.

기계장치의 무상 양도

Q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양도 받게 되었습니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및 내용연수를 산정해야 함에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 비용 + 기계장치 수리비용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금액이 합당한 것인건가요?

이때, 내용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야 하나요?

A

1. 무상으로 양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감정평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톨비 대납분 정산

Q 차량운전 용역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톨비를 먼저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증빙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도로 통행료 대납분에 대한 청구를 받아 지급하시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납부 영수증을 증빙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정산 특례 적용 범위

Q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퇴직정산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의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해 승계된 직원의 퇴직으로 당사 근속기간과 양도 회사로 부터 승계된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당사에서 실행된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을 합산하여 이번 퇴직 시 근무기간과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퇴직자로 부터 제출된 중간 정산 문서중 양수도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양수도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의 기간및 퇴직급여도 퇴직정산 특례 적용의 대상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A 퇴직금 승계처리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양수도회사간에 결정하는 사항인데 양수도 계약에 의해 근속기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승계하였다면 원래 귀사의 직원들과 동일하게 처리 하면 되므로 양수도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중간정산 기간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사무용품 등은 소모품 자산으로 반영후 결산시 소모품비로 비용 대체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회사는 영리추구를 위해 수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기업이 사용하는 자원에는 건물이나 기계장치·차량 등처럼 사용기간이 길고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책상 등과 같은 가구나 컴퓨터, 팩스·프린터, 문방구, 청소용품, 필기구 등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고 비싸지 않은 물품들도 많다.

이처럼 사용기간도 길지 않고 사용하는 대로 닳아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물품들은 집기·비품으로 자산반영을 하여 다른 감가상각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사용하는 대로 닳아 없어지게 되는 물품들은 소모품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먼저 자산(소모품)으로 반영하였다가 결산시점에 실제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먼저 비용(소모품비)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시점에 미사용 분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용품 등은 비품으로 반영

업무에 사용되는 물품 중 컴퓨터나 프린터, 책상 등 사무용 가구 등은 그 사용기간(내용연수)이 1년 이상이므로 자산으로 반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때 사용하는 계정이 비품이다. 따라서 컴퓨터나, 업무용 가전제품, 프린터, 가구 등은 구입시 비품으로 반영한 뒤 결산시점에 내용연수에 맞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① 구입시점

차) 비품(자산으로 반영)	1,000	대) 보통예금	1,000
----------------	-------	---------	-------

② 결산시점(감가상각하여 비용반영)

차) 감가상각비	200	대) 감가상각충당금	200
----------	-----	------------	-----

사용기간이 1년 미만 사무용품 등은 소모품으로 반영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필기구·복사용지·문방구 등의 각종 사무용품, 종이컵·건전지 등의 각종 일회용품 등은 사용기간이 짧으며, 장치 등의 유형자산과 구분되고 책상·의자·컴퓨터 등의 집기비품과도 구분되는 소모성, 일회성 물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은 최초 구입 시에 유형 자산이나 집기비품이 아닌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여 회계반영한 뒤, 결산시점에는 실제 사용한 만큼만 ‘소모품비’라는 비용계정에 대체시키면서 자산에 반영하였던 소모품 계정에서 감액시키면 된다.

즉,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의 특성상 금액이 크지 않은 일회성, 소모성 용품이라도 전체금액을 무조건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분만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례1) 사무용 소모품 1,000원 현금으로 구입 후, 12월31일 결산시점에 소모품 조사한 결과 미사용분 300원이 남아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① 소모품의 구입시점(먼저 자산으로 반영)

차) 소모품(자산으로 반영)	1,000	대) 현금	1,000
-----------------	-------	-------	-------

② 결산시점(미사용분을 제외한 실제 사용분 700원을 비용으로 반영)

차) 소모품비	700	대) 소모품	700
---------	-----	--------	-----

사무용품이나 일회용품 등의 소모품을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소모품 등을 최초 구입하는 시점에 우선 비용으로 처리한 뒤, 추후 결산시점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산에 반영하면서 비용처리된 부분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먼저 자산으로 반영한 후에 실제 사용분만 비용처리하는 방법과 반대인 방법인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결과는 같게 되므로 실무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사례2) 사무용 소모품 1,000원 현금으로 구입 후, 12월31일 결산시점에 소모품 조사한 결과 미사용분 500원이 남아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① 소모품의 구입시점(최초 구입시점에 우선 비용으로 반영)

차) 소모품비	1,000	대) 현금	1,000
---------	-------	-------	-------

② 결산시점(미사용분을 자산으로 반영)

차) 소모품	500	대) 소모품비	500
--------	-----	---------	-----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 가능한 연말정산 공제누락 사례

주요 항목	공제 누락 사례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 (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 · 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이후 발급받아 세액공제 하는 경우



— 연금 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①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
- ②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라.
- ③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④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



주요국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현황

국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여부	손익통산	이월공제
미 국		○	장단기 자본이득구분해 통산 후 순 단기손실과 순장기손실은 각각 장 기소득과 단기소득에서 공제	장단기 구분 이월기간 무제한 소급 공제 불가
일 본		○	상장주식, 주식형펀드의 순손실은 배당, 분배금, 양도소득에서 공제	이월기간 3년 소급공제 불가
영 국		○	자본이득 내에서 포괄적으로 통산	이월기간 무제한 소급공제 불가
독 일		○	주식 양도손실은 주식 양도차익과 상계	이월기간 무제한(100만 유로 초과 : 소득의 60% 한도) 소급공제 1년 허용 (100만 유로 한도)
한국	금투세 시행 후	○	금융투자상품 소득 및 손실금액 합 산	이월기간 3년
	금투세 시행 전	×	×	×

※자료: 관계부처합동, 나라살림연구소



소득금액 5천만원에 대한 소득 유형별 산출세액과 실효세율

소득 유형	주식양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소득금액(a)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기본공제금액(b)	50,000,000원	1,500,000원	1,500,000원	-
과세표준(c=a-b)	-	48,500,000원	48,500,000원	50,000,000원
세율(d)	-	15%	15%	14%
산출세액(e=c*d)	0원	6,015,000원	6,015,000원	7,000,000원
실효세율(f=e/a)	0%	12%	12%	14%

* 주식양도소득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산출

※ 자료: 참여연대



패배가 예상되는 경쟁은 하지 마라

자신이 패배할 때는 물론 자신과 관계 있는 무언가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누구나 기분이 언짢아진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하는 팀이 지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데, 자신이 패배하는 상황이라면 더 언짢아질 게 분명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질 만한 경쟁은 하지 않고, 질 것 같은 자리에는 아예 얼굴을 내밀지 않는 편이 좋다.

모든 경쟁을 피하라는 말은 아니다. 경쟁을 완전히 회피하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다만, 패배할 확률이 높은 경쟁은 멀리하고 승리할 만한 경쟁에 힘을 쏟는 편이 이롭다는 뜻이다. 나아가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을 만큼 자신에게 중요한 경쟁에만 집중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나 노력 중인 분야에서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외 분야에서는 재빨리 빠져나오는 걸 목표로 삼아보자. 쓸데없이 초조하거나 기분이 언짢아질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중개하는 어플 서비스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단순히 소득을 전달·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
징수 의무가 없음

서면원천-2440, 2023.04.19

Ⅰ 질 의

- 질의법인은 어플을 통해 심리상담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와 상담자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충전금에서 상담 후 이용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질의법인은 차감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담자에게 지급함

질의

- 상담자에게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Ⅰ 회 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가 적용됨

서면법규소득-4192, 2023.05.17

Ⅰ 질 의

- '13.2.15. 전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0년간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후
- 별도의 계약변경 없이 당초 계약(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저축성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

Ⅰ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가 적용되어 해당 추가납입보험료까지 고려하여 보험차익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444, 2023.10.24

Ⅰ 질 의

-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를 갑이 A주

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인지 여부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
증자의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지 여부)

■ 회 신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별도세대인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
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
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
기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
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
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5731, 2023.10.23

■ 질 의

- (질의1)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
한 상태에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B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⑤에
따른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
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
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C오피스텔
에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령
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
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
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
(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
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
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
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
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전문강사료는 기타소득일까... 중소세 개인별 유의사항 신고검증 받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초 종합소득세 대상 중 115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발송했으며, 사전안내 가운데 '개인별 유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신고검증에 착수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전안내 자료는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으로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외 성실신고에 도움 되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이 있을 경우 해당 대리인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 측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 해주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세금포인트로 우수 중소기업제품 할인... 15일부터 할인쇼핑몰 기획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는 가전, 건강기능식품,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할인판매되고 있다.

15~23일에는 꽃바구니 기획전, 오는 31일까지 리뷰 이벤트가 열린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은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 액수에 따른 일종의 마일리지로 직장인, 사업자라면 세금포인트가 꾸준히 누적된다.

자신이 보유한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경우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평균 13억원 넘어... 평균 양도세 3억원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천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천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천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천689억원)보다 1조9천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천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천261억원으로 평균 3억1천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천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 국세청, 2024. 5

- (납부기한 자동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2.(월)까지 연장합니다.
- (세정지원 패키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건설·제조업	15만 명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음식·소매·숙박업	110만 명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
- ◆ (채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

- (수출기업 지원)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수출기업	5천 명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2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	---

-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 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2 :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31.(금)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됩니다.
 -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참고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사항

Q1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 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참조)

Q2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2.(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나요?**

-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나요?

-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Q5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 예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연장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9.2.(월)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4.(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1백만 원
- 자세한 분할납부 가능금액과 분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4년 9.2.까지 10,000,000원, 2024년 11.4.까지 5,000,000원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4년 9.2.까지 11,000,000원, 2024년 11.4.까지 11,000,000원

Q6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나요?

- 예.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9.2.(월)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는 9.2(월)까지 하더라도 신고는 5.31.(금)까지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Q7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환급안내문을 받았는데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나요?

-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써, 11월에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 신청 없이 9.2.(월)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5.31.(금)까지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 국세청, 2024. 5

-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합니다.
-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5.9.(목)부터 모바일로 보내드렸으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바일 발송 실패자는 서면안내문 발송)

| 올해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주요 항목 |

- 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
- ②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성실신고 안내
- ③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
- ④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도록 안내

- (신고도움 서비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안내 내용 |

· 신고안내유형 · 기장의무 · 납부기한 연장여부	· 개인별 유의사항 · 업종별 유의사항 · 동일사업자평균소득률 (업종·수입금액·지역)	· 사업장별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 소득·세액공제 항목 · 신고시 적용할 가산세	·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	· 주택임대 수입금액 · 국내 주택보유 내역
-----------------------------------	---	---	--	-----------------------------

-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참고자료) |

①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②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③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④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참 고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사례 1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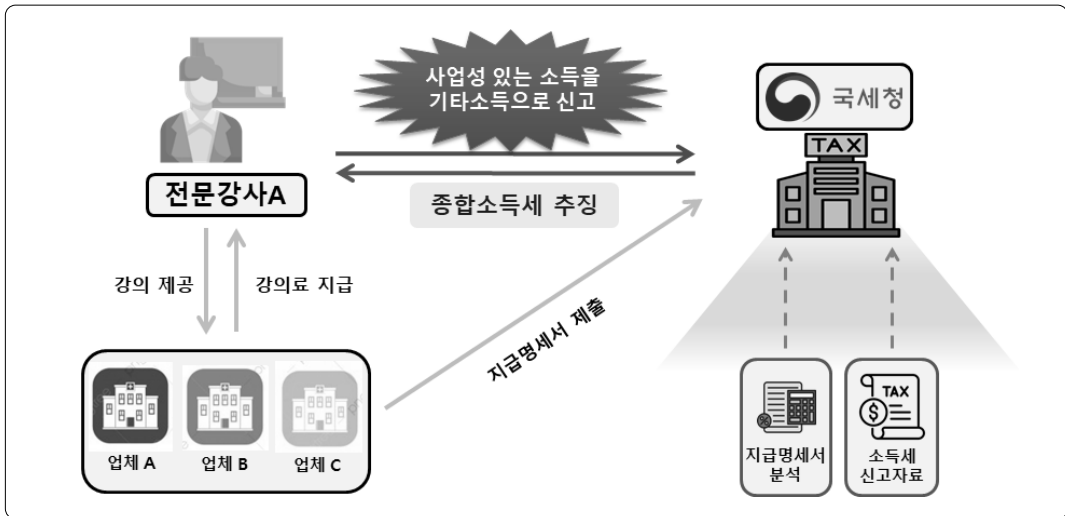
-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함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신고내용 확인 결과

-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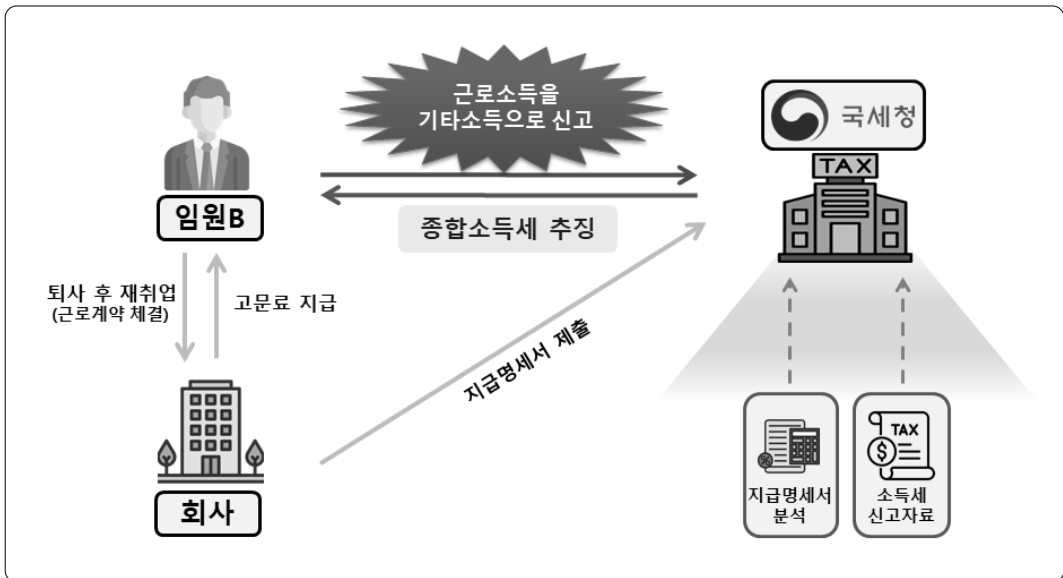
사례 2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 법인의 임원 B는 2022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함
-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신고내용 확인 결과

-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B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 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 임원 B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사례 3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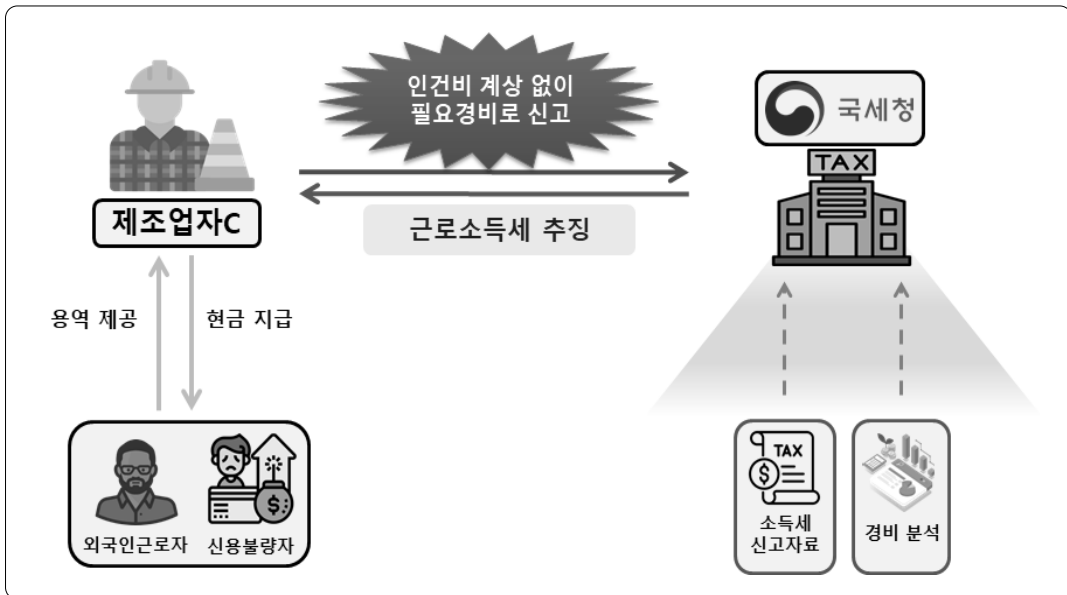
분석 내용

- 제조업자 C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 제조업자 C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석 결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직원 수 대비 과도하게 계상된 것으로 분석됨



신고내용 확인 결과

- 회사가 인건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이 없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 제조업자 C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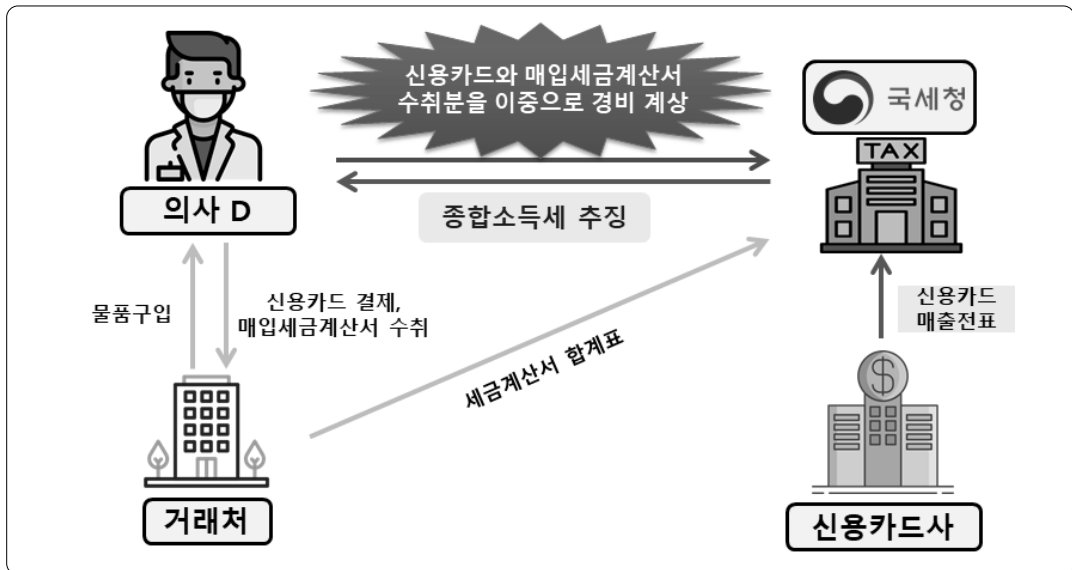
사례 4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 의사 D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함
-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신고내용 확인 결과

- 국세청에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사 D는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을 증빙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필요경비 이중 계상 여부에 대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 의사 D는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 국세청, 2024. 5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추진사항)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입니다.
 -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¹⁾, 음원 수익증권²⁾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 2) 투자자가 음악저작권을 구입, 그 노래의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 채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이 채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채납자와
 -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납자,
 - 채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채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채납자 등
 -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채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합니다.
 -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채납자와
 -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씹씀이가 큰 채납자 등
 -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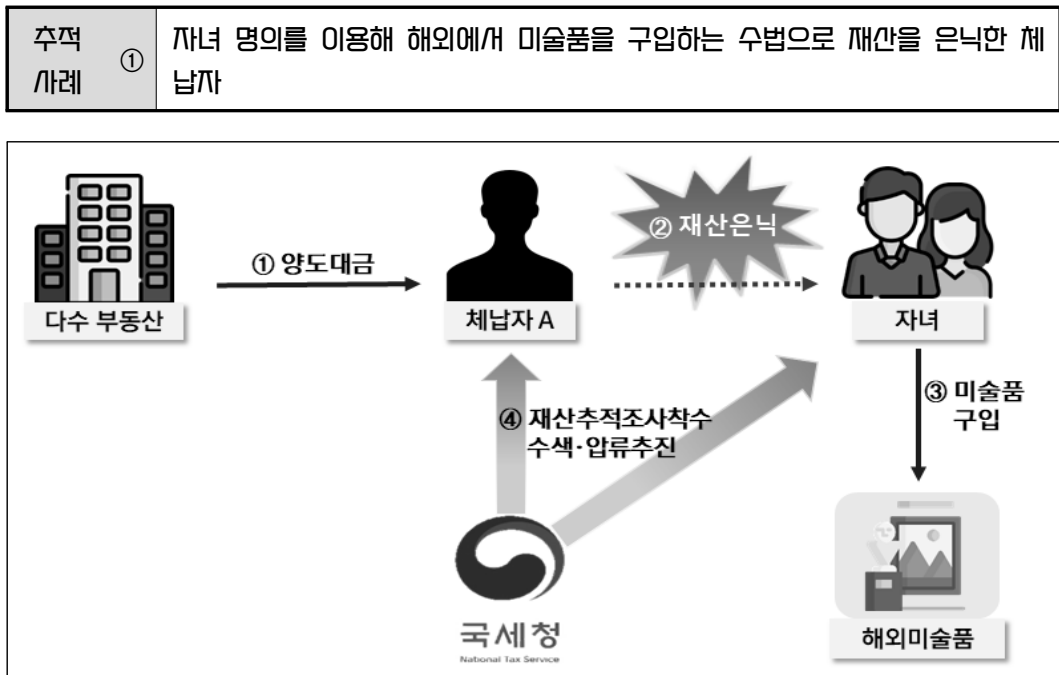
- 국세청이 '21년부터 세금 채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4.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추적사례5
 -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채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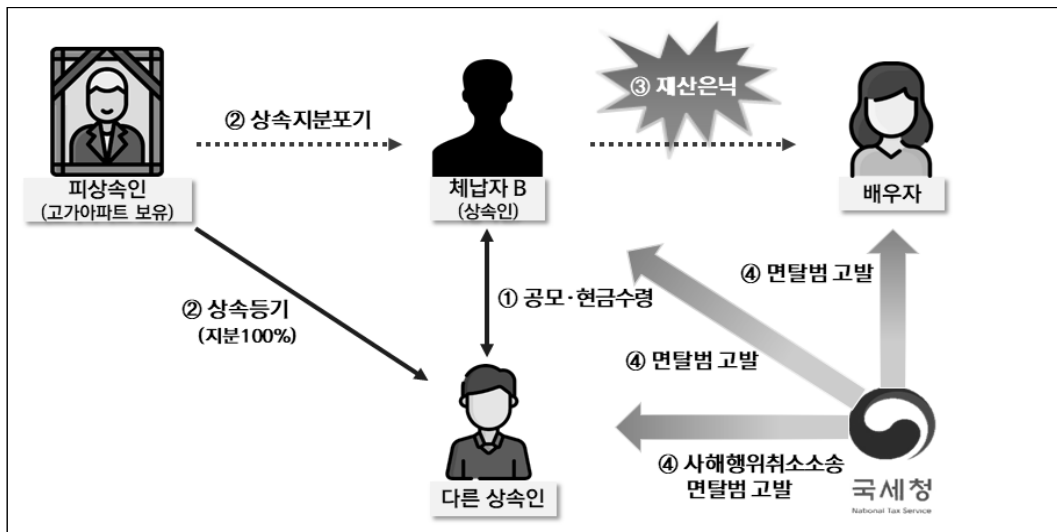
- (추진성과)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브·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 주요 추진사례



- 채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〇〇억 원 채납
 -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던 사람으로 이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채납이 발생함
 - A는 양도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〇〇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재산추적조사 진행
 - 채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 실시
 - 채납자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하여 숨긴 미술품을 압류하기 위해 채납자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수색하여 강제징수 추진

추적 사례 ②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강제징수를 회피한 채납자
---------	---



- 채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〇억 원 채납
 - B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채납자임
 - B의 모친은 사망 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것을 예상함
 - 이에 B는 다른 상속인과 짜고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며, 대신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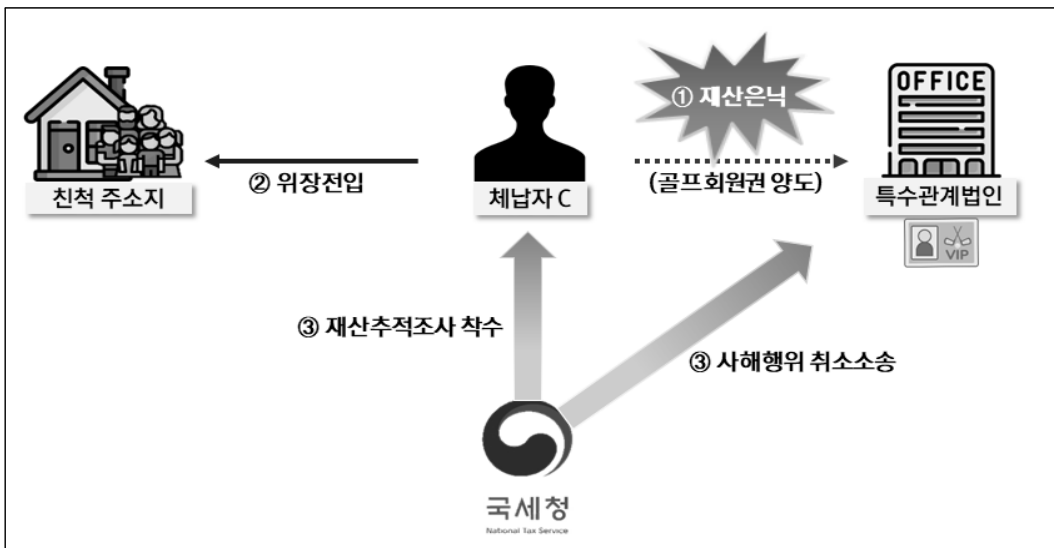


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함

● 재산추적조사 진행

- 체납자의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주적 사례 ③	체납이 발생하기 직전에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골프회원권을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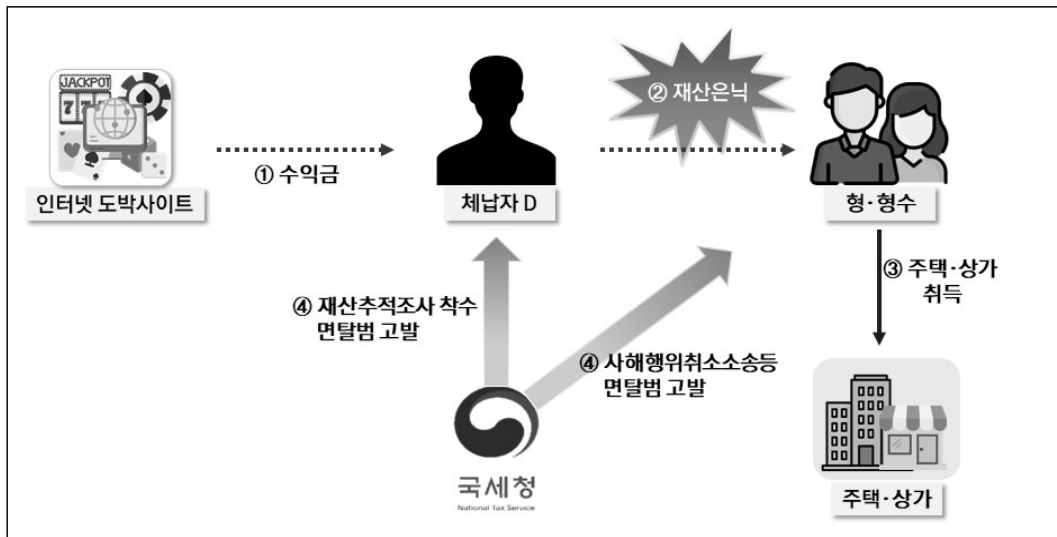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〇〇억 원 체납

- C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밝혀져 종합소득세가 고지됨
- C는 고지된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징수가 취해 질 것임을 예상하고 체납 발생 직전에 〇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 양도 후에도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
 - 또한, 체납 발생 직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실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

● 재산추적조사 진행

- 채납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채납자의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집행
- 채납자가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주적 사례	④ 불법 수익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은닉하고 호화생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	---



● 채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〇〇〇억 원 채납

-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채납 발생함
- D는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데 사용함
 - 또한,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압류가 취해질 것을 예상 채납발생 전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재산추적조사 진행

- 채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
- 채납자가 형수에게 명의 이전한 아파트에 대해 형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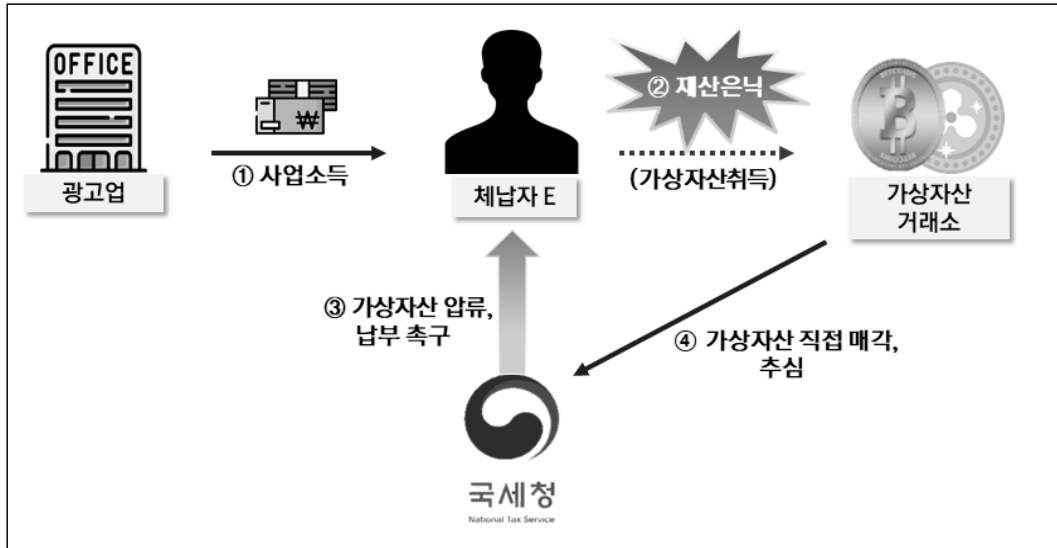


채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법으로 고발

추적
사례

⑤

고액·상습채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징수



● 채납 및 강제징수 현황 : 부가가치세 등 무신고 고지, 〇억 원 채납

- E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총 〇〇전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채납자로서 가상자산 〇억 원을 취득한 사실 확인
- '23.8월 채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전화, 우편 등으로 수차례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 '24.5월 과세관청이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 〇억 원을 징수

※ [참고]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절차

- 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 → 압류 : 이전·매매 동결
- ② 채납자에게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매각 예정 통지
- ③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한 가상자산의 이전 요청
-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
- ⑤ 세무서장은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

붙임 2 - 수색 사례

주적 사례 ①	전직 학원 이사장, 자녀 명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고가의 미술품·명품가방·귀금속 등 은닉, 총 3억원 징수
------------	--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서 학교 운영권 매각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〇〇억 원 체납 발생
 -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하여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하는 등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
- 수색집행 결과
 -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함
 -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약 2억원 상당),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하여 총 3억원을 징수함

주적 사례 ②	지인 명의로 미술관에 은닉·보관해 놓은 그림 수집 점을 찾아내어 10억원 상당 압류
------------	--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 등 〇〇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
 - 현장정보 수집, 금융조회 등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자금이 관련인들을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함
- 수색집행 결과
 - 체납자와 자금거래가 있었던 관련인들에게 질문·검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자금으로 취득된 미술품들이 〇〇미술관에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은닉·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명의자인 지인에 대한 추가 질문·검사를 통해 미술품의 실제 소유자가 체납자임을 확인, 〇〇미술관을 수색하여 총 10억원 상당의 그림 수집 점을 압류함

추적
사례 ③

수색 집행으로 금고, 옷장, 싱크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 총 5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세금 납부는 하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집행 실시

● 수색집행 결과

- 개인금고, 옷장, 싱크대, 화장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 총 5억원 징수

붙임 3 - 고액채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고액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 확인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채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 모바일 : 모바일 국세청(어플) >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정보공개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 국세청, 2024. 5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2024. 5. 1.부터 5. 31.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Q & A)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 & A」를 알려드립니다.
 - 그밖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상담사: 5. 1.~ 5. 31.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365일 24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

번호	구분	질문 내용
Q1	자녀 장려금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2		▶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Q3		▶ 소득이 4천만 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4		▶ 연말정산 시(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5		▶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6		▶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번호	구분	질문 내용
Q7	소득 관련 (근로·자녀)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8		▶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9		▶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10		▶ 대리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1		▶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2		▶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3		▶ 음식점 매출이 6천만 원이면 3,200만 원(홀별이 가구) 이상이니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Q14	재산 관련 (근로·자녀)	▶ 1억 5천만 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 원) 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Q15		▶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Q16		▶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Q17		▶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18		▶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Q19	기타 (근로·자녀)	▶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Q20		▶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 (지급시기) 5.3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위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5.31.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 & A 20

자녀장려금

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3 소득이 4천만 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제도 확대에 따른 자녀장려금 수령액 변화 사례 |

□ 18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가구로서 재산합계액 1억 5천만 원

귀 속	‘22년	‘23년
총급여액 등	남편 23백만 원, 아내 20백만 원	좌 동
재산합계액	1억 5천만 원	좌 동
소득기준(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	7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160만 원 (자녀 1명당 80만 원*)

* 자녀장려금 산정표: 총급여액 43,000천 원 이상~43,500천 원 미만 → 80만 원



4

연말정산 시(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 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2023. 12. 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 ▶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관련

7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작물(화훼 등) 재배업 :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농어가 부업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 어업 :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10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2023. 12. 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 4만 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13

음식점 매출이 6천만 원이면 3,200만원(홀벌이 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업종별 조정률 적용 사례 |

□ 음식점 매출 6천만 원, 홀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재산합계액 1억 5천만 원

구 분	장려금 계산		
총급여액 등	매출 6천만 원 × 업종별 조정률(음식점업 40%) = 24백만 원		
재산합계액	1억 5천만 원		
장려금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액*	3,207천 원	1,267천 원	1,940천 원 (970천 원 × 2명)

* 총급여액 등이 24백만 원인 홀벌이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상 금액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형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마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바	고급·유형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아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차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 활동	90%

재산 관련

14 1억 5천만 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 원) 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 ▶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 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5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 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나
- *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 전세금 가액 평가 사례 |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백만 원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 원
⇒ 전세금: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무상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 1.3억 원
⇒ 전세금: 1.3억 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실제 임차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

16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7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음
다른 재산 + 금융재산 → 1.7억 원 이상(장려금 50% 감액), 2.4억 원 초과(장려금 지급 제외)

18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 ▶ 2023. 6. 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기 타

19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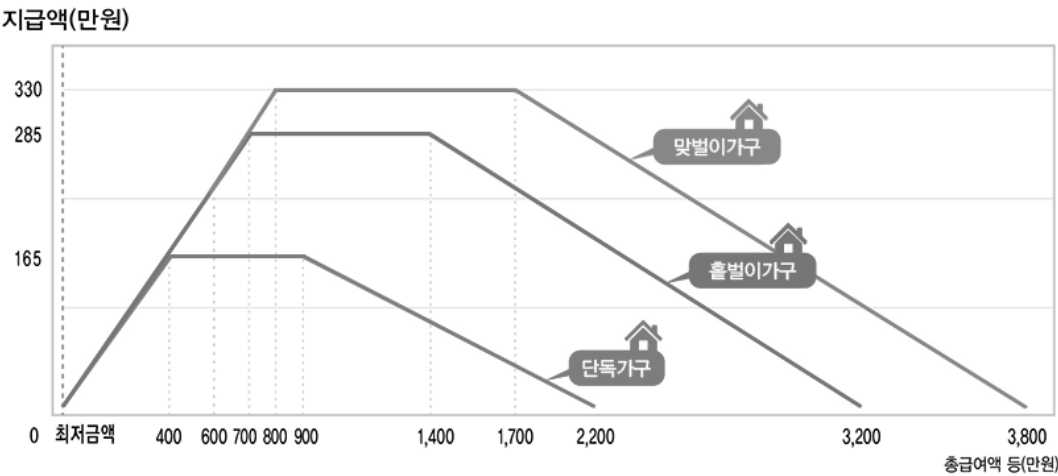
20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 ▶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① 총급여액 많은 자 ② 장려금 많은 자 ③ 전년도 신청자
다만,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

참고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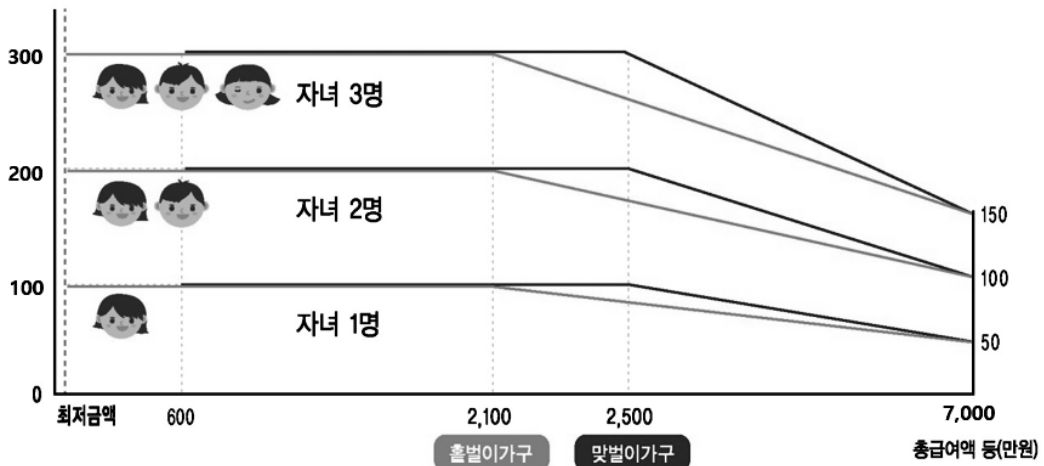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지급액 만원



탄탄한 업무협력으로 튼튼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 국세청, 2024. 5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4. 5. 10.(금)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입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직능별 국선대리인 위촉 현황('24. 5. 1.) /

(명)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계
275	18	32	325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의 자발적 지식기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 * 국선대리인 전담직원 지정,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
-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협력에 합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과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국세청 변해정 납세자보호관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으며,
-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상기 조세지원본부장은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선대리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련 직능단체와 업무협력을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 한국회계기준원, 2024. 5

1 배경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하고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함
 -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주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 제정 동향 참조
 - 이러한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준 적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제 기준과 정합하며 국내 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 한편, 육아 친화 경영 및 산업안전과 같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정책 목적의 지표)를 선택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험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함

2 제정 경과

-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동향 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마련
 - ① (국제동향 분석) 주요국의 공시기준 제정 관련 최신 동향 모니터링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자문기구(SSAF), 회계기준제정기구 국제포럼 (IFASS),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AOSSG) 등 국제 회의 참여
 - 유럽, 일본, 호주, 홍콩 등의 해외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구와 제정 동향 논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회의 내용 모니터링



- ISSB 위원장·부위원장 초청 공시기준 세미나, 미국 SEC, EU EFRAG 및 일본 SSBJ 초청 세미나 등 개최

② (이해관계자 논의) 현장 간담회와 기준원 내에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투자자 전문위원회,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공시기준(안)의 정보 유용성에 대해 논의
- * 자본시장의 핵심 이해관계자(경제단체, 투자자, 민단 전문가 등)로 구성
-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242개社)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총 21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시기준(안)의 기업 수용가능성에 대해 논의
- 유관기관, 법령 전문가, 학계 등과 공시기준(안)의 제정원칙,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
- 정부 관계부처 및 위원회의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기업에게 공시가 권유되는 항목들을 식별 및 반영

3

제정 원칙

- 국제 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기준을 제정
 - (국제 정합성) ISSB 기준을 시작점으로 하여 EU·美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해외에서 활동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수출 기업 등)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
 - (정보 유용성) 투자자에게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
 - (기업의 수용가능성) 국내 산업의 상황과 특성 및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 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4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

가 공시기준 구성

-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및 제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공시 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IFRS S2 기반)
추가공시 (선택) 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선택)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나 공시기준 주요 내용

① 기후 의무 공시 (제1호)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해야 함
 - 기후 관련 사안은 기업의 재무 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또한, 기후 관련 사안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들보다 정량화가 용이하여 기업의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다만 기업이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고자 한다면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제시

② 보고기업 (제1호)

-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에 대해 작성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보고기업이 재무제표와 동일할 때 자본시장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또한, 보고범위가 제한될 경우, 정보공시 회피로 워싱(Washing)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은 연결실체의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
-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연결실체 입장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함

③ 온실가스 배출량(제2호)

-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3) 관련 측정방법 등 기준을 제시
 -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국제기준(GHG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요구하는 다른 측정 방법(예: 탄소중립기본법상 기준)의 사용도 허용

- 다만,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의무화 여부, 의무화 시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

④ 산업기반지표 (제2호)

- 산업기반지표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 동일 산업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산업별 기준이 부재하여, 산업별로 공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

⑤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제101호)

- 현재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산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지속가능성 재무정보와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유용성을 향상시키고,
 - 육아 친화 경영, 산업 안전, 인권 경영, 장애인 고용 등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
- 기업은 제101호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 항목별로도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음

5 향후 계획

- 공개초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조치를 수행할 예정
 - 공개초안 의견조치기간: 4개월('24.5.1부터~'24.8.31까지)
 - * 의견은 구글 설문지와 회계기준원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을 통해 제출받을 예정
 - ⇒ 회계기준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이미 약 200여개 상장사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4개월간의 의견조치기간 이후에도 최종기준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
 - 의견조치 기간에는 기준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KAI포럼('24.5월 중순 예정)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할 예정
- 최종 기준 발표와 동시에 기업들의 공시기준 적용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나 교육자료(예: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중요성 판단 등)를 제공할 예정